



유로재정안정기금(EFSF) 레버리지화 논의 확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 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유럽이 현재 4,400억 유로에 불과한 유로재정안정기금(EFSF) 규모를 레버리지를 통해 수조 유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FSF 레버리지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.
 - EFSF 레버리지화는 9월 16~17일 유럽재무장관 회담에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유럽 측에 제안한 내용으로 미국이 금융위기 때 시행한 바 있는 유동성 지원 방식임.
 - EFSF를 레버리지화 하는 한 가지 방법은 EFSF에 은행자격을 부여함으로써 EFSF가 매입한 국채를 유럽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동성을 공급받아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방식임.
 - EFSF 레버리지화의 다른 대안은 ECB의 도움을 받지 않고 EFSF가 민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은행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.
- EFSF 레버리지화는 유럽위원회(EC) 내에서도 논의되어 왔으나 독일, 네덜란드, 핀란드 등 재무구조가 건실한 국가들로부터 거부되어 왔으며, 유럽중앙은행(ECB)도 EFSF 레버리지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짐.
 - 독일은 EFSF 레버리지화 아이디어가 이론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, EFSF의 근본적인 변화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결정을 유보함.
 - 유럽중앙은행(ECB) 이사회 멤버이자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엔스 바이트만은 EFSF가 정부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ECB가 EFSF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ECB의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ECB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.

■ 미국은 EFSF를 레버리지화 하도록 유럽을 압박하고 있지만 11월로 예정된 G20회의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- 한 비공개 회의에서 유로 회원국들은 국내 정치문제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으며, 최대한 노력하더라도 EFSF 레버리지화 방식을 평가하는 데에만 6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.
- 또한 일부 관료들이 EFSF 레버리지화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7월에 합의된 제2차 그리스 지원 패키지 안의 의회 통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7월 합의안이 각국 의회를 통과한 후나 EFSF 레버리지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.
- 독일의 한 관리는 EFSF 레버리지화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EFSF 레버리지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며, ECB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.

■ 한편 S&P의 데이비드 비어스 국가 신용평가 부문 대표는 유럽 정치권이 EFSF 레버리지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 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EFSF 레버리지화가 여러 가지 경로로 프랑스,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.

- 그는 EFSF가 레버리지를 동원하더라도 제약 없이 차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, EFSF를 위한 저렴하고 리스크 없는 차입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유로존 내에서의 인식이라고 강조함.
- 또한 그는 EFSF가 ECB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는 방식의 경우 각국의 정치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의 영향도 줄일 수 있겠지만 ECB가 부실화되는 경우에는 유로존 국가들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.
- EFSF 레버리지화가 시행되는 경우 현재 AA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EFSF 자체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힘.

(Financial Times 등, 9/26)